

비전2030 시리즈 ①

## ‘비전2030’ 실현을 위한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전략

- 비전2030에서는 50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, 그중 네 번째 과제로서 “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”이 중요한 장기전략으로 다루어지고 있음

### [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]

- 수도권 과밀해소,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
  - 대덕단지 클러스터화와 연계하여 충청권에 경제·행정중심도시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
    - ※ 사업기간: '05~'30, 총사업비: 8.5조원
  - 공공기관(175개)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을 연계하여 혁신도시 건설을 체계적으로 지원
    - 지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의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
    - ※ 혁신도시건설지원법 제정 및 도시별 기본구상안 마련('06년), 사업착공('07년), 공공기관 이전('10~'12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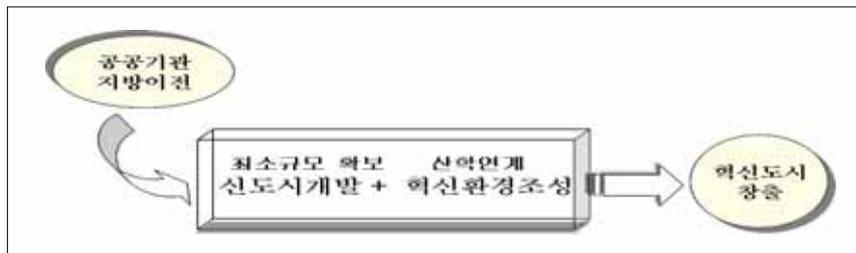
출처: 정부·민간합동작업반. 2006. 『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2030』, p103

- 비전2030의 네 번째 핵심과제 중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

## 1. 혁신도시 건설의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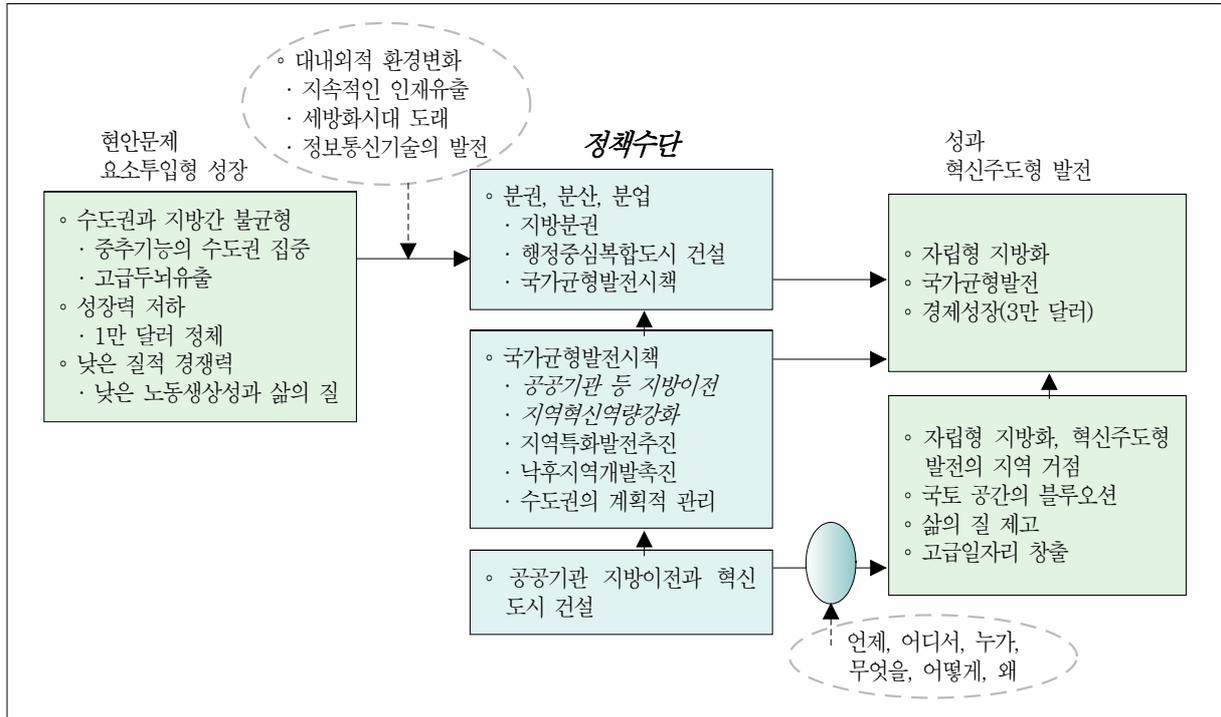
-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핵심으로 하여 사이언스 파크, 혁신 클러스터, 신도시 건설 개념이 포함됨
-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기본으로 하여 산·학·연·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교육·주거·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미래형 도시

[그림 1]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개념



- 혁신도시 건설의 목적은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해소, 자립형 지방화, 그리고 혁신환경 조성에 있음
- 국가적 차원에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혁신주도형 경제의 지역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
- 지역적 차원에서는 자립형 지방화의 거점, 차세대 신공간, 혁신창출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
- 국지적 차원에서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,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여 상호학습하고 교류함으로써 높은 혁신을 창출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음
- 혁신도시는 2003년 대구구상에서 시작되어 2005년 말까지 입지선정, 2006년 말까지 지구지정이 완료되고, 2012년 말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계획
- 혁신도시는 광역대도시 내(부산, 대구, 울산), 광역대도시 인근 중소도시 내(광주·전남), 중소도시 내(강원, 경북, 경남, 제주), 중견도시 외곽(전북), 농촌지역(충북)에 입지

[그림 2]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혁신도시 건설의 위상



●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전략산업과 지역특성화발전에 직·간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혁신도시 창출에 기여

- 이전공공기관은 그 특성상 전국적인 기능을 수행하며, 인프라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과 산업이 특화된 기관으로 구분 가능한데, 지역전략산업발전에 직·간접적으로 기여
  - 인프라기능: 산업진흥, 교육·학술진흥, 근로복지, 산업안전, 인력개발, 과학기술, 국토개발관리, 도로교통, 중소기업진흥, 국민연금, 교육연수, 국제교류, 국세관리 기능
  - 산업특화기능: 해양수산, 금융, 영화진흥, 가스, 전력, 에너지, 광업진흥, 건강생명, 관광, 정보통신, 농업, 식품연구, 문화예술, 주택건설 분야는 특정산업발전에 기여
- 지역산업과 지역특성화 발전에 직·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외에도 아래 내용에 기여함
  - 지방에 고급일자리 제공의 계기가 됨
    - 공공기관은 대학졸업생들이 선호하는 취업대상으로 벌써 지방에서는 이전공공기관과 관련된 학과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음
  - 수도권 인구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 기대됨
    - 공공기관이전이 완료되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85%에서 35%로 감소

-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것이 기대됨
-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이 기대됨
-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
- 지식기반형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
- 지방 인프라 확충 및 건설수요 증가가 예상됨

## 2.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지역 창출사례와 시사점

- 스웨덴의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지역 창출에 간접적 역할
  - 스톡홀름 도시권의 확장과 인구집중 심화로 이전정책 시작
    - 이전기관의 성격, 이전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그리고 도시규모를 고려
  -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고려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을 이전→이전한 기관이 지역대학에 연구자금 제공→연구결과물의 축적→다국적 기업 이전·기업 스핀 오프→사이언스 파크 설립·활성화에 이룸
    - 옹살라, 메르데비, 이데온 사이언스 파크 등은 기관이전의 영향을 받음
  - 스웨덴 유일의 약학과를 가진 대학의 역량으로 식품청(1973년, 300명), 사회청 의약국(1973년, 200명)이 옹살라로 이전, 1984년 사이언스 파크 조성의 계기가 됨
    - 조성 20년만인 2004년 옹살라 사이언스 파크는 약 150여개의 기관과 기업이 입지한 생명공학산업 메카, 세계 4대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성장
-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지역 창출에 직접적 역할
  - 파리의 집중문제와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추기능을 지방도시에 배치
    - 낙후지역개발(제1기, 1960~1990년)보다는 지방중심도시 성장(제2기, 1991~2003년)을 목표로 했을 때 성과가 높게 나타남
  - 전략적인 기관은 대도시(지방대도시 육성)로 이전하고, 그외 기능은 유관기관이 입지한 지역이나 지역잠재력과 특화산업을 고려하여 중간규모 도시에 입지

- 공공기관 이전시 테크노폴이 건설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테크노폴로 이전하였으며, 이전공공기관들은 이공계 연구기관이 대부분이고, 파리 소재 대학, 기업 동반유치
    - 메쯔, 낭시브라보아, 렌느 애틀랜타 등 테크노폴 내에는 공공기관, 대학, 관련기업이 입지하여 테크노폴의 성장과 더불어 혁신지역으로 발전
  - 동일기관이더라도 기능별로 분리하여 타기관의 기능과 협력하여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 여러 지역으로 분리·분산하여 각 지역의 특성화 지원
    - 국립과학연구소(CNRS: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) 각 부서는 리옹, 낭시브라보아, 스트라스부르, 오르레앙 테크노폴 등으로 분산·배치
  - 테크노폴 내로 이공계 공공연구기관만이 아니라 파리 소재 대학, 공기업까지 동반 이전·집적시킴으로써 지방에서 인구가 증가할 정도로 균형발전을 이룸
- ➔ 스웨덴 및 프랑스 사례는 이공계 연구기관과 대학의 이전, 특화기술분야 선도 기업의 이전·입지가 혁신지역 창출과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시사함

### 3.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추진전략 및 향후 과제

#### ● 추진전략

- 혁신도시는 선도전략, 거점공간전략, 전문화전략, 체인전략, 클러스터전략을 포함
  - 선도전략은 중추기능 중 공공기관을 선도기관으로 하여 이전
  - 거점공간전략이란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여 지역거점화
  - 전문화전략이란 시도의 특화·전략산업과 이전공공기관의 전문분야를 연계·집중
  - 체인전략이란 전후방연계 기업·기관이 공공기관이 입지한 거점공간으로 연쇄 이전
  - 클러스터전략이란 기업·기관이 집적·연계되어 협력·경쟁함으로써 경쟁력 제고

[ 표 ]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체크리스트

분류	입지·규모적 측면	단지 조성 및 건설 측면	선도기업유치, 기술혁신 및 창업 지원·운영 측면	사회적 자본 구축 측면
주요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교통·통신접근성</li> <li>• 첨단기술·고급 전문인력 접근성</li> <li>• 모도시 인구규모</li> <li>• 혁신도시 규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단지개발비용</li> <li>• 단지 분양의 융통성</li> <li>• 유연한 토지이용</li> <li>•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</li> <li>•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주환경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선도 기업·기관 유치</li> <li>• 혁신지원기관 운영</li> <li>• 네트워크 시설 운영 / 활성화</li> <li>• 인큐베이터 설립·운영</li> <li>• 모험자본 활성화</li> <li>• 운영조직의 리더십과 역량</li> <li>• 국제적으로 개방된 네트워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직적·수평적 연계</li> <li>• 사회적 자본구축을 위한 제도</li> <li>• 뿌리내림</li> </ul>

자료: 권영섭, 2005.

## ● 향후 과제

### ○ 입지 및 규모적 측면

- 혁신도시는 교통통신, 첨단기술, 전문인력 그리고 시장접근성을 고려할 필요
- 입지선정 이후에는 유치·연계를 통한 접근성 제고 및 규모 확대 노력 필요

### ○ 조성 및 건설 측면

- 단지개발 비용을 낮추고, 선도기업 유치시 무상임대 등 적극적 인센티브 제공 필요
- 가치체인상의 기업과 기관의 교류를 높일 수 있도록 유연한 토지이용 실천 필요
-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주환경을 조성할 필요

### ○ 선도기업 유치, 기술혁신 및 창업지원·운영 측면

- 혁신도시의 조속한 뿌리내림과 성공적 발전을 위하여 선도기업 유치 필요
- 지역전략산업 관련 이공계 연구기관 분원 유치, 테크노파크, 창업보육센터, 지역특화센터 등 기업지원기관 유치를 통한 기업들의 입주 유도 필요

### ○ 사회적 자본 구축 측면

- 혁신주체간, 과학·산업·교육·지역정책간의 연계는 혁신도시 성공의 지름길
- 인지 → 필요 → 협력 → 신뢰 구축을 위한 산·학·연·관 협력 지원제도 형성 필요

● 국토연구원 국토·지역연구실 권영섭 연구위원 (031-380-0165, yskwon@krihs.re.kr)

「비전2030」과 관련된 주제는 향후 국토정책브리프 시리즈로 계속 소개될 예정임